

한국의 도시지식에 관한 고찰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도시상황을 중심으로

조명래*

이 글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사회적 상황 속에 규정된 도시현실의 특성과 이의 인지적 반영으로서 도시지식(도시론)의 유형과 내부지형, 그리고 담론적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이란 시점을 선택한 것은 이때부터 도시화가 성숙기를 맞았고, 또한 현재의 도시공간은 이 기간에 획득된 도시적 개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의 순서는 도시지식의 개념적 문제를 살펴본 뒤, 1980년대 후반 이후를 ① 1987년에서 1992년, ② 1993년에서 1997년, ③ 1998년에서 2002년, ④ 2002년에서 2007년까지로 나누어, 시대별 '정치경제적 상황', '도시쟁점과 도시주체의 반응', '도시공간의 생산', '도시해석', '도시론', '도시의 근대성'을 논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도시담론의 유형화를 도출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주요어: 도시현실, 도시주체, 도시지식지형, 도시담론

1. 서론

전체 인구 중 도시거주자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한국의 도시화율은 90%에 육박한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경 도시화율은 9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선 나라들의 도시화율이 평균 75% 수준에 이른 뒤에 둔화되었던 것과 견준다면 현재 수준으로도 한국의 도시화율은 참으로 앞서 있다(조명래, 2003). 이는 우리의 도시들이 여전히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그 강도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는 것을 뜻하지만,

* 단국대학교 교수(mrcho55@kornet.net)

달리는 우리의 역동적 삶이 대부분 도시란 공간의 역동적인 형성을 통해 전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의 도시화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지만 도시와 사회적 삶의 결합이 깊어진 것은 1980년대 후반 혹은 199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 곡선이 한 사이클을 주파한 이때부터 도시로의 인구집중, 즉 도시화의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령, 서울의 인구성장 곡선은 1992년에 최고점에 달한 뒤 지금까지 정체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질적 구성 변화다. 이때부터 도시의 주인공은 그동안의 이농 1세대에서 이들이 낳은 2세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베버(Weber)의 표현을 빌리면 ‘도시적 인성(urban personality)’을 가진 근대 시민이 마야호로 등장한 것이다(조명래, 2002). 그 후 1997년 환란위기를 거치면서 성장기 동안 얼기설기 꾸러지던 도시적 삶은 자본주의적 법칙에 순응하는 것(예: 고용관계의 양극화, 상품소비관계의 심화 등)으로 전면 재편되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도시공간은 도시적 삶의 심화된 사회성을 담아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숙기 도시화의 내부적 삶의 지형만 아니라, 이때부터 불어 닥친 지구화, 탈산업화, 탈근대화, 탈도시화 등과 같은 거시사회 변동의 물결과 합류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고 다채로워진 도시적 삶의 지형을 투영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공간은 ‘심층 도시성(deep urbanity)’을 품게 되면서 읽고 독해할 거리가 풍부한 텍스트로서의 성질을 띠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도시는 한국사회의 복잡한 삶의 열개를 투영하고 있다. 도시공간은 도시 주체들의 삶 자체를 투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계획과 같은 공간정책적 개입을 통해 유기적으로 생산되기도 한다. 도시는 단순한 수동적, 표상적 공간이 아니라 적극적, 작위적 공간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정치적 지향성이나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간을 조형하는 행위로서 ‘공간적 작위(作爲)’는 도시주체들이 도시공간의 의미를 해석하고 투쟁하는 담론적 실천의 결과를 반영하지만, 그 속내는 한

국 자본주의의 근대성 자체다. 즉, 도시주체들이 자의식적 지적 인식을 통해 그들의 삶터로서 도시를 읽고 해석하며 미래를 전망할 뿐 아니라 나아(betterment)을 위한 실천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도시는 한국적 근대성이란 주제를 함축한 텍스트가 되어 있다(조명래, 2005).

이 글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사회적 상황 속에 규정된 도시현실의 특성과 이의 인지적 반영으로서 도시지식(도시론)의 유형과 내부지형,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이란 시점을 선택한 것은 이때부터 도시화가 성숙기를 맞았고, 또한 현재의 도시공간은 이 기간 동안 획득된 도시적 개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은 도시 지식의 개념적 문제를 살펴본 뒤, 1980년대 후반 이후를 ① 1987년에서 1992년, ② 1993년에서 1997년, ③ 1998년에서 2002년, ④ 2002년에서 2007년까지로 나누어,¹⁾ 시대별 ‘정치경제적 상황’, ‘도시쟁점과 도시주체의 반응’, ‘도시공간의 생산’, ‘도시해석’, ‘도시론’, ‘도시의 근대성’을 논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도시담론의 유형화를 도출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2. 도시지식이란?: 도시의 현실과 지식의 관계

도시는 ‘인간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의 집결지’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의 삶 치고 도시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게 없으며, 이는 오늘날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도시의 이야기는 뻣뻣하게 쓰인 일기책과도 같고 장편 대화소설과도 같다. 도시에 대해선 그만큼 쓸 거리도 많고 읽고 해

1) 정부의 재임기간 구분과 대체로 일치하는 이러한 시대구분은 한국사회가 겪는 정치경제적 변동이 정부의 국정운영 패턴과 맞물려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정책이나 도시 관련 담론의 지형도 대개 이러한 시간적 변동과 맞물려 변화를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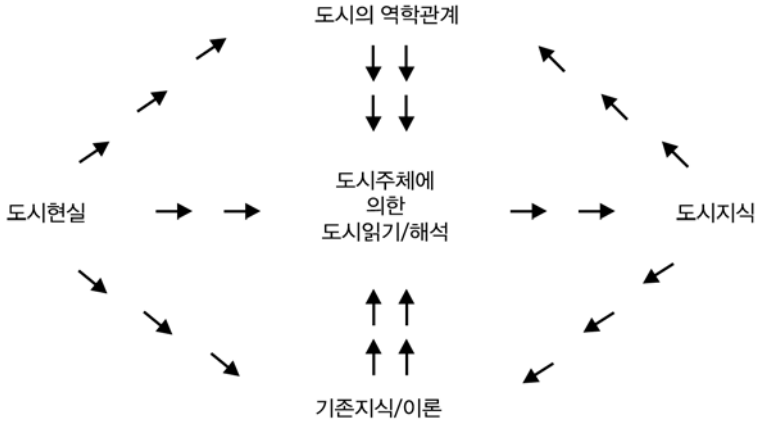
석할 거리가 많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해하며, 이에 더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은 도시에 관한 앎, 즉 도시에 관한 지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도시를 마주하면 우리는 그 도시가 이렇다저렇다 하면서 나름대로 도시를 인지한다. 이러한 인지는 대개 상식과 느낌, 그리고 선입견으로 이루어지기 일쑤다. 이에 견주어, 도시지식이라 하면 체계적인 사고나 분석과 같은 지적(知的) 작용을 통해 얻어진 도시에 관한 앎,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표현되는 이론, 담론,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와 지식의 관계는 도시와 사람 간의 인지적 작용 관계를 매개로 하며, 그 관계의 여하는 도시의 존재조건은 물론이고 도시를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조건,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지식은 확실하고 근거가 있는 인식으로 단순한 신념 또는 억견(臆見)과 구별된다. 따라서 도시지식은 도시에 관해 확실하고 근거 있는 인식으로 막연한 상식과 느낌에 근거한 도시적 앎과는 구분된다. 도시지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도시론, 도시담론, 도시이론 등이 있다. 도시지식은 이런 특화 되고 전문화된 도시에 관한 앎에 견준다면 도시에 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앎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이러한 이론과 담론의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외견상 도시지식은 도시에 관한 정제된 이론(theory)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지식은, 과학이란 행위를 통해 습득된 것으로, 도시란 ‘구체적(concrete)’인 탐구대상을 ‘추상적(abstract)’으로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앎, 즉 ‘도시에 관한 추상지(抽象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통해 체득된 것이면서 도시정책과 같은 실천을 구성하는 ‘도시에 관한 경험지(經驗知)’도 도시에 관한 앎, 즉 도시지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경험지라고 해서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인 지식이 아니란 점에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신념에 근거한 인지적 앎과는 구분된다.

어떤 유형이든, 도시지식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도시 현실(urban reality)에 대한 지적인 반추이자 추상화라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도시지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반추되어 형성될 수 있는 대상,

<그림 1> 도시지식의 생성구조



즉 도시현실이 존재해야 한다. 특정 시대, 도시의 현실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회적 상황, 이를테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도시란 공간을 통해 투영해 낸다. 따라서 특정시대의 도시현실은 그에 상응하는 도시지식을 만들어낸다.

도시현실은 도시지식으로 자동적으로 반추되고 생성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주체인 도시 관련 주체들이 도시의 현실을 읽고 해석하는 ‘인지적 작용과정’을 매개로 한다. 이 인지적 작용의 문제는 지식의 생성, 본질, 속성을 따지는 인식론에 해당한다. 때문에 도시지식의 생성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실제 생산하고 유포하는 지식 주체의 역할이다.

지식주체로서 도시주체들이 도시를 읽고 해석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이뤄지거나 혹은 그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하나가 도시에 관한 기존 지식, 특히 기존의 지배적인 도시이론이나 그 패러다임이라면, 다른 하나는 도시의 현실과 지식구조를 둘러싼 역학구조다. 전자와 관련해서 보면, 도시지식의 주체들이 도시를 대하고 읽으며 분석

하고자 할 때는 현실을 가장 적실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고 믿는 도시 관련 기존 이론과 지식을 하나의 관점 혹은 분석도구로 활용한다. 기존 이론과 지식이 도시 현실을 읽고 해석하는 연역의 바탕이 된다는 뜻이다. 한편 후자와 관련해서 보면, 도시현실의 특정부분을 읽고 해석하거나, 특정 도시 관련 이론을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도시현실과 지식구조를 둘러싼 사회세력의 역학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가령, 진보적인 신념의 도시학자는 사회약자의 관점에서 도시현실의 모순을 바라보고, 또한 급진적 이론에 의거한 도시설명과 실천을 선호한다면, 그의 이러한 지적 입장은 도시사회의 역학구조나 지식구조(예: 학과 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지식이나 역학구조는 분리되어 있다가보다 도시 현실을 읽고 해석하는 맥락 혹은 관점으로 합쳐져 주체의 입장으로 녹아들어 있고, 주체의 입장 차이가 도시지식의 유형을 구분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정리하면 도시지식은 ① 도시현실, ② 도시 관련 지식주체, ③ 도시의 역학구조, ④ 도시 관련 지식의 패러다임, 네 요소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생성되고 변화를 겪는다. 조형된 도시지식은 하나의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이들 간에는 도시현실을 읽고 해석하는 도시 관련 지식주체 간의 역학적·인식론적 관계를 반영한다. 이는 지식유형 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유형의 도시 지식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관계지형을 투영한다. 이를 우리는 ‘도시의 지식지형(the knowledge topography of city)’ 혹은 ‘도시의 지식지도(the knowledge mapping of city)’이라 부를 수 있다. 도시의 지식지형은 사회(구조)적 상황을 투영하는 현실로서 도시에 대한 관념, 의미해석, 과학적 설명, 인식론적 실천 등으로 엮여지는 얽힌 관계라 정의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도시현실을 읽고 바꾸려는 지식주체, 이를테면 도시지식의 생산자, 전파자, 수용자들 간 복잡한 관계식이 도시의 지식지형이다. 도시에 관한 여러 얽힌 관계를 표현하지만, 그 얽힌 표현은 궁극적으로 삶터로서 도시현실의 지형 지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도시의 현실과 이의 지적 구성물인 도시 지식지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 간에는 일종의 ‘토대와 상부구조’, ‘물질과 관념’, ‘실재와 재현’ 같은 관계가 놓여 있다. 도시란 존재를 하나의 통일된 실체로 보기 위해선 양자가 서로를 규정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시는 지식에 투영되어 추상화되지만, 추상화된 도시지식은 도시의 물성(物性)을 거꾸로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데로 그 매개는 도시주체의 지적이고 사회관계론적인, 즉 인식론적 입장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생성된 도시지식은 도시사회론, 도시경제론, 도시정치론 등과 같이 도시의 특정 측면을 특정한 입장(지식과 역학관계로 구성)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도시(담)론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 시대 지배적인 지식지형은 당대의 사회적 상황성과 도시 공간에 투영되어 드러나는 도시문제(the urban question)의 분석(도시현실의 분석), 이의 의미에 관한 지배적 해석(주체의 관점으로 독해)과 언어로의 재현(추상화, 이론화)의 순서를 밟아 조형된다. 도시의 지식지형은 언어적 담론으로 드러나지만, 그 속은 당시의 지배적인 도시주체들의 인식론적 관계(지적, 사회역학 관계)로 채워져 있고, 그 밑에는 도시현실의 지형이 깔렸다.

지식의 문제는 철학, 교육학, 사회학 등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온 주요한 주제다. 철학은 인간이 앎을 획득하는 근거나 방식을 인식론과 결부하여 지식의 문제를 다룬다면, 교육학은 획득된 지식의 획득, 내용, 전달 등의 관점에서 다룬다. 반면 지식사회학은 지식이 어떠한 사회적 요인을 조건으로 취하며 또 그 요인과 어떻게 기능적 관련을 갖는지, 즉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주로 논의한다. 이 글이 다루는 도시지식도 ‘지식의 도시적 구성’으로 간주한다. 즉, 도시의 정치경제상황을 도시주체들이 읽고 해석하면서 도시를 일정한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도시에 관한 집합적 앎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도시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지식에 관한 기존 논의나 연구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그리고 본 연구의 접근방법과의 비교는 생략하기로 한다.

3. 1987~1992년: 민주화와 토목적 도시지식

1) 정치경제적 상황

1987년 6·29선언으로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국민은 정치지도자를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인 ‘87년 민주화 체제’가 출범했고, 그와 함께 국가에 의해 억압된 시민사회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민주화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특징 짓는 키워드였다. 정치영역에서의 민주화는 경제영역에서 사회적 부의 창출,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계층의 지각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를테면 1980년대 후반 이른바 ‘3저(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덕택에 대규모 흑자가 3년간 발생했고, 이 토대 위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소비적 정체성을 갖는 도시 중산층이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더불어 노동분규가 확산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 생산체제의 합리화,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의 전환, 국외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과 같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자본주의의 한 단계 성숙을 말한다.

2) 도시쟁점과 도시주체의 반응

이 같은 정치사회적 변동은 그에 상응하는 도시적 변용과 쟁점을 수반했다. 무엇보다 당시의 도시상황은 그간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빈발하고 있는바, 그 핵심은 토지주택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점이다. 성장기 도시의 후유증으로 이는, 성장과 개발에 매몰된 정치경제 체제(system)의 모순이 시차를 두고 생활세계(life world)에서 나타난 것이다. 실제 부동산 투기 붐과 가격양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속출했다. 전·월세 파동으로 세입자들의 자살, 재개발을 둘러싼 가옥주와 세입자의 갈등, 강제철거에 따른

주거 약자들의 인권유린,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발생과 특정계층에 의한 이의 전유 등은 이러한 현상의 구체적인 예들이다. 이러한 도시쟁점에 대한 도시주체들의 직접적인 반응은 세입자운동, 철거반대운동, 노동운동과 결합된 주민운동 등과 같은 초보적인 주거운동 형태로 나타났다(한국도시연구소, 2003). 민주화의 도시적 반영이라 할 수 있는 주거운동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자의식적 실천이란 의미를 띠었지만 국가 혹은 자본권력에 대응하는 범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이 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주체적 대응은 막 열리기 시작한 시민사회를 무대로 도시 중산층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기 시작한 시민운동이다(예: 1987년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발족). 한국의 근대 시민운동의 효시이기도 한 도시시민운동은 토지주택문제를 국가주도적 개발과정에서 억압된 사회적 공공성(예: 토지주택의 공공성)의 문제로 해석하면서 이를 시민사회적 권리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면서 토지주택문제는 급기야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정치사회적 쟁점மாக 지 비화되었고, 그 결과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200만 호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등이 정권 차원에서 강구되기 시작했다.

3) 도시공간의 생산

이런 상황은 도시공간의 생산, 나아가 도시담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공간생산이란 측면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사건은 5개 신도시 건설이다. 이는 주택부족을 일시에 풀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말이 신도시 건설이지 실제 대규모 주거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적 도시건설 방법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실제 동원하는 방법은 택지(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치우쳐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도 「택지개발촉진법」이다. 이 법은 토지의 물리적 조성과 개발, 그리고 분양을 뒷받침하는 데 우선하기 때문에 도시의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담보하지 못

한다. 또한 단기간에 택지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막대한 개발권을 부여받은 개발공사가 사업추진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개발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실상 지정하고 지구 내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으며 저렴하게 수용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뒤 민간에게 분양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초헌법적 특권’을 향유한다. 한편 개발이익은 공사(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부분 환수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자, 그리고 그 토지 위에서 건설된 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에게 돌아간다. 신도시 건설은 이렇듯 건설 관련자나 거주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국가주도적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의 매력은 신도시 건설이 단기간에 완료되고 또한 남발되는 까닭으로 작용했다.

물론 신도시 건설이 우리나라 도시계획 발전에 견인차 구실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린지구(생활권) 단위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 주거시설과 공원 등을 배치하는 계획적 주거공간은 한국 근대 도시계획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도시계획가들에게 신도시는 그래서 계획적 이상을 거리낌 없이 펼치는 장과 같았다.²⁾

하지만 정부의 압도적인 지원과 독려에 의해 추진되었던 만큼, 권위관료주의 국가의 권력성이 신도시란 공간의 생산을 사실상 가능케 했다. 국가 입장에서는 대량의 주택을 일거에 공급함으로써 외견상 주거안정, 특히 투기적 욕구를 숨긴 중산층의 주거욕구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이는 나아가 정권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데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은 해계모니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와 같은 것이

2) 이런 이유로 신도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다수 전문가는 많은 성과와 효과가 있지만 대규모 주거 병영지를 조성하는, 그러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중산층에게 몰아주는 신도시에 대해선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자족성, 미래 변화에 대한 적응성 등을 결여한 한국의 신도시는 한 세대용 도시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신도시 거주자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들의 높은 주거만족도는 주거환경의 쾌적성, 주거질, 주택가격 상승 등에 대한 것으로 구성된다. 실제 신도시는 공간구성, 편익시설, 녹지율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적인 구도시에 비해 앞서 있다.

었다. 그러나 인구 30~40만이 사는 도시를 불과 4~5년 만에 건조해낸 물질력은 자본의 힘이었다. 1980년대 후반 3저로 발생한 ‘교역흑자’는 막대한 사회적 잉여자본을 발생시켰고 이의 일부가 건설자본으로 전환되어 신도시 건설의 재원으로 투입되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표현으로 제1차 순환영역의 과잉자본이 제2차 순환영역으로 옮겨가면서 형성된 건조환경이 우리의 신도시들이다(조명래, 2002).

4) 도시해석

성장기 도시의 후유증인 토지주택문제는 생활세계 속으로 불거져 나온 개발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인지되면서 자의식적인 도시민들이 이를 시민사회적 쟁점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도시공간은 도시주체들의 치열한 해석과 의미투쟁의 장으로 점차 변모해 갔다. 그 해석과 투쟁은 대안적 도시공간(예: 토지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건설)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했다. 물론 도시에 관한 기성지식(이론)이 없었던 것 아니지만, 강단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 서구학계로부터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도시론이 관련학계를 암묵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하나는 미국 시카고학파의 도시생태학이론에 뿌리를 두면서도 크게는 근대화론에 근거한 ‘근대도시론’(근대도시의 공간구조, 토지이용구조, 사회구조에 관한 설명)이라면, 다른 하나는 종속이론에 기반을 둔 ‘제3세계 도시론’(도시의 이중구조, 개발이익의 전유와 갈등, 도시빈민 문제 등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지식은 한국적 도시현실로부터 추출해 나온 경험지라기보다, 도시의 현상을 설명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이론, 즉 추상지에 가깝다. 도시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경험지로서 도시지식은 정치사회적 역학 속에서 규정되고 만들어져야만 했다. 이 점에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은 도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도시지식의 한국적 지형을 형성해내기에 충분했다. 실제 신도시 건설의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도시를 해석하는 입장의 분화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었다. 이를 테면 신도시 건설을 지지하는 측은 근대 합리성을 기술공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도시를 읽고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그 이면엔 국가 및 자본의 강한 권력성이 깔려 있다. 반면 반대 또는 비판하는 측은 국가권력과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으로 토지주택문제, 나아가 신도시건설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도시공간을 물리적 실체 이상으로 바라보되, 특히 시민 권력성을 반영하는 입장을 취했다. 크게 보면 이러한 지식지형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성을 투영하는 것이라 할 수 했지만, 언어적으로 정제된 도시 지식(도시이론)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5) 도시론

이러한 지식지형 속에서도 지배적인 것은 도시공간을 건조해내는 도시계획 관련 지식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는, 신도시 건설을 처음부터 주택의 대량 공급이란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도시건설과 관련된 기술 관료적 혹은 토목공학적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까지만 도시계획 지식은 일제 강점기부터 전수되어 온 토목공학이나 국외에서 들여 온, 서구식 합리주의를 반영하는 도시계획론이 중심을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 도시의 특질이 어떠한 것이고 도시민의 권리를 도시공간에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에 관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토목공학적 도시지식은 도시건설에 합리성이나 중립성을 부여해주기에 충분하다. 해서 정치적 지배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식으로 신도시 건설을 내밀히 추진하는 데 토목공학적 도시지식은 유효했다. 시민사회가 초기에 있었기에 국가를 견제하는 시민적 목소리가 약했던 상황도 토목공학적 도시지식이 우월하게 작용하는 까닭이 되었다. 토목공학적 도시지식은 이후 제도권 기관들(정부기관·학회·연구소 등)이 주도하는 도시정책이나 연구 사업에 사용되는 일반지식으로 제도화되고

강단을 통해 재생산되면서 지배적인 도시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6) 도시의 근대성

권력화된 토목공학적 도시지식은 역설적이다. 민주화의 진전과 중산층의 출현으로 도시의 자의식적 주체들은 도시문제를 생활세계의 모순으로 인지하고 이를 시민사회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국가와 자본권력에 의한 것으로 대체되었다. 막 열리기 시작한 시민사회(생활세계)가 국가와 자본권력에 의해 식민화되는 역설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권력화된 토목공학적 도시지식이다. 이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던 개발권력이 도시공간의 읽기와 생산에까지 침투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지식은 개발 근대화 담론의 일부가 된 것이다. 말하자면 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형성된 도시지식의 지배적인 지형은 도시를 통해 ‘개발 근대성’을 발현시키는 지식주체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한다는 뜻이다. 이 개발 근대성은 권력화 된 기술적 합리성을 주로 표방한다.

4. 1993년에서 1997년: 개방화와 성찰적 도시지식

1) 정치경제적 상황

1987년 민주화 체제 등장 이후의 첫 결실은 1992년 문민정부의 출범이다. 군부 통치에서 문민 통치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화의 여파, 즉 개방화의 물결을 몰고 왔다. 일차적으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복원되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교실이라 본다면, 1992년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복원된 지방자치제는 도시적 일상 삶을 규율하는 권력의 제도적, 공간적 작용방식에 심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경제적으로 1990년 전후로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점증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드센 바람이 경제적 삶 전반에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정부는 그간의 개발주의 국가운영방식과 정책을 심대하게 손질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했다.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도의 철폐가 대표적인 예다. 이런 개혁과 함께 김영삼 정부는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내부로부터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의 효시가 된 ‘세계화’ 전략을 강구했다. 기업과 시장자율성을 내세운 ‘신경제정책’의 수립,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국외자본의 급격한 이입, 대기업들의 경쟁적 ‘세계경영’ 도입, 교역 자유화에 의해 수입된 상품을 일상 소비재로 쓰는 소비방식의 변화 등은 세계화 전략이 추진되면서 나타난 한국사회 변화의 중요한 단면들이다. 이러한 변화를 망라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국사회가 개방되고 다원화되며 사회적 삶 전반이 시장경쟁 원리에 조응하는 것으로 재편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적인 반응으로 세계학계에서 풍미하던 다양한 ‘포스트 이론’들이 도입되면서 한국사회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쟁이 일었다.

2) 도시쟁점과 도시주체의 반응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도시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도시 인구 증가의 둔화다. 그칠 줄 모르고 증가하던 서울의 인구가 1992년에 최고점(1,080만 명)을 찍은 뒤 하향적 정체 패턴을 보이는 것은 이런 변화의 백미다. 도시로의 인구집중 둔화, 도시인구의 자연증가 둔화, 대도시 주변 신도시로 인구 유출 등의 요인들이 겹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도시의 인구 성장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도시주변으로 도시인구와 활동의 확산이 본격화되어 있는데, 이는 곧 한국의 도시화가 집중적 단계에서 분산적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인구집중과 그에 따른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던 도시발전의 단계는 마감되고 도시 인구의 질적 구성과 활동구조가 내부적으로 고도화되고 심화되는 단계로 옮겨갔다. 이는 발전주의 도시에서 탈발전주의 도시로의 도시패러다임 전환이 1990년대 들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말한다(조명래, 2002).

도시패러다임의 이행은 성장기 동안 내부적으로 응축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들이 과열하는 현상을 동반했다. 1992년 성수대교 붕괴, 1994년 지존파 연쇄살인사건,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 등이 그 구체적인 예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발전주의 도시로서 지속되고 있는 도시발전의 관성과 탈발전주의 도시로서 변신을 지향하는 새로운 관성이 부딪히면서 나타난 이행기 도시의 과열이라 할 수 있다. 발전 패러다임의 교차는 도시 산업공간의 지각변화에서 더 명확히 나타났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구로공단과 같은 산업지역이 쇠퇴하는 반면, 첨단산업(특히 생산자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강남지역은 신산업과 그에 관련된 소비 및 주거지역으로 부상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이와 연동된 고용관계, 직업 및 소득 구조, 소비양식, 계급구성, 정치적 역학 등을 포괄하는 도시사회 전반의 재편이 공간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서울 같은 대도시는 탈근대 도시로서의 경향적 특징들을 나타냈다. 이를테면, 탈산업화, 소비양식의 고도화, 소비적 주체의 등장, 문화경관의 고도화, 세계화와 개방화, 기업주의 지방정치 등과 같은 ‘탈근대적 현상’들이 대도시 공간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소자(Soja)는 ‘탈근대성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stmodernity)’라 불렀다(조명래, 2002).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영향으로 개성적 도시주체의 등장이다. 이는 도시의 인구구성이 이농 2세대 중심으로 바뀌고 탈산업적 고용관계와 소득향상으로 인한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시민권적 의식이 고양되고 자치체의 진전으로 참여자치가 활성화되는 등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도시주체의 등장과 함께 포스트 담론의 확산으로, 이행기 도시에 대한 다양한 성찰적 해석이 시도되면서 도시의 지식지형은 다채로워졌다

3) 도시공간의 생산

탈발전주의 도시로의 이행과 이를 둘러싼 담론의 활성화는 한국적 도시공간의 생산을 주도하는 정부의 도시정책에 의해 촉진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민선시장 시대를 맞으면서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시의 2대 민선시장은 1995년 7월 1일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시장직을 인수인계하면서 취임했다. 취임 전에 그는 도시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학습했던 것이다. 그래서 취임 후 그는 ‘붕괴할 화려한 건물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제창했다. 그의 이러한 도시인식을 ‘인간주의 도시관’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의 실험적 도시계획은 현실에서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결국 통상적인 도시계획으로 돌아갔다. 대규모 도시개발은 억제되었지만, 용산지구 부도심개발, 상암지구 택지개발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종전과 달리 도시관리의 역점은 물리적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기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도시로서 개성과 경쟁력을 담보할 공간구조 및 기능을 강화하는 데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는 도시의 읽기와 해석이 그만큼 달라졌음을 말한다. 즉, 도시 읽기와 해석의 중심이 권력에 의한 수동적 개발의 공간에서 탈근대 도시로서 정체성과 역량을 발현하는 공간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정책으로 1994년 남산 외인아파트의 폭파, 1996년 구충독부 건물인 중앙청의 철거, 1997년 여의도 5·16 광장의 생태공원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성장기 도시개발의 상징하던 남산 외인아파트를 예산 1,800억 원 들어 해체한 것은 ‘남산 제 모습 찾기’(이를 통한 서울의 정체성 회복)란 탈개발주의적 명분을 위

한 것으로 근대 도시에서 탈근대 도시로의 도시 패러다임 이행을 표상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4) 도시해석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도시주체들에 의한 근대적 도시개발과 함께 도시에 관한 다양한 읽기와 해석을 촉발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상황이 탈물질성이 두드러지는 도시로의 변모, 지식분야에서 포스트의 논쟁, 소비적 도시주체의 등장 등의 경향과 합쳐져서 1990년대 중반 도시에 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이 중에서도 도시공간이 포스트모던 문화현상을 표출하는 것으로 변하고, 이에 상응하여 물질적 풍요 위에 개성적 삶을 선호하는 개성적 도시주체가 출현하는, 두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도시지식의 지형은 전에 없이 다채로워졌다. 도시를 하나의 문화적 기표(記標)로 설정하고, 그 기표가 제출하는 약호와 의미를 성찰적 주체들이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도시현실과 도시주체 간의 인지적 작용관계가 설정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도시를 생존을 위한 터전이나 개발의 대상, 즉 즉물(卽物)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종전의 도시지식과 견줄 때, 새로운 도시지식은 도시를 경관, 문화, 정체성 등과 같은 탈물질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분석과 기술 대신 해석과 독해의 방식으로 읽고자 한다. 말하자면, 종전의 도시지식과 달리 1990년대 도시지식은 도시를 공학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스토리가 담긴 텍스트로 독해하면서 도시주체들이 자기다움을 구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찰적 읽이었다. 학문적 구분법을 사용하면 종전의 도시지식이 국가와 자본에 의해 권력화된 토목공학적 지식이라면, 새로운 도시지식은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지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도시의 주체들이 도시를 자기의 삶터로 바야흐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바라본 도시가 더 이상 하드웨어적이고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독해를 통해 읽히는 사회문화적 실체로 간주된 점

이다. 말하자면, 1990년대 들어 도시는 도시주체들에 의해 읽혀지는 텍스트가 된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에 의해 조형된 사회구조가 공간적으로 구축된 장이거나 아니면 일상주체들이 그리는 시공간적 궤적의 장이 도시란 텍스트의 내용이다. 전자가 도시공간을 거시적 사회구조의 발현체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행위자의 미시적 생활세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간에 담기는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조건이 어떤 것이냐, 혹은 행위자들의 생활공간을 규정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공학적 실체로 바라보는 종전의 도시읽기나 해석과 분명히 구별된다.

그렇다고 도시지식의 이러한 생성과 전유가 도시의 모든 성원에 의해 공유된 것이 아니다. 이는 다분히 지식전문가들이 향유하는 추상지라면 일반 서민들이 체득하는 경험지는 각박한 삶의 현장으로 도시를 읽고 해석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형 안전사고들을 통해 자각되는 도시의 인간주의 문제, 개방화와 자유화가 조형해낸 도시문화의 외피 속에 발견되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 등이 도시를 일상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속에 사유하는 새로운 쟁점이란 점에서 종전의 경험지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인지되는 도시에 관한 상상적 얇은 언론, 드라마, 문학작품 등에 주로 반영되었다.

5) 도시론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조형된 도시지식은 도시주체들이 텍스트화된 도시를 성찰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관계의 지형을 주로 반영했다. 도시의 지식지형이 이렇게 구축된 것은 도시의 변모한 현실에 대한 도시주체들의 성찰이란 인지작용의 역동성이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흥미했던 비판적 이론들이 도시란 공간환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지적 도구로 적극 활용한 덕분이기도 했다. 후기구조주의 이론들로 구성된 비판적 성찰적 이론들은 공학적 지식이 지배하는 기성제도권 학

계나 기관이 아니라 비판적 학계나 진보적 언론매체에 의해 수용되어 전파되었다. 지식수용자 또는 생산자가 기존의 주류 도시지식인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주체들은 1980년대 이후 열린 시민사회나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정서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개발주의 시대의 주류 지식인과의 다르다.

비판이론의 시각에서 새로운 지식주체들은 도시를 사회문화적 구조의 현상으로 읽고, 권력적 지배가 관철되는 도시적 삶의 모순을 들추어냄으로써 무엇보다 탈이념적 물리적 공간으로만 바라보던 기존 도시지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도시론이 있다. 자본주의와 도시를 결부시켜 도시공간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적 도시론과 도시공간이나 이를 재현하는 문화매체(영상, 이미지, 영화 등)를 텍스트로 하여 도시행위 주체들의 의식과 행위양식들을 설명하는 인문학적 도시론이 그러하다. 전자가 공간정치경제학을, 후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회자된 도시론으로는 지구도시론(global city), 후기 포드주의 도시론(post-Fordist city), 유연적 도시론(flexible city), 탈산업적 도시론(post-industrial city), 스펙터클로서 도시(city as a spectacle), 상징으로서 도시론(city as a symbol)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도시담론이 우리의 도시현실과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해석해주지 않는다. 또한 도시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기에 급급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과 같은 실천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해안을 주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추상적 도시담론이 도시지식 지형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옴으로써 도시지식의 주체들은 도시를 개발의 대상이나 도구로만 삼는 게 아니라 사회시스템과 결부된 도시의 구조적 문제로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도시의 논의는 물론 도시의 개혁에 관한 다양한 상상력이 풍부해졌다. 해석의 대상으로 떠오른 1990년대 도시가 깊숙이 담고 있는 사회성을 읽어내고 해명하는 데 서구에서 도입된 포스트 담론이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지만, 이를 통해 획득된 한국 도시의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6) 도시의 근대성

199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의 앞선 도시들은 탈근대적 증후군을 표출 하면서 도시에 관한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었다. 도시 이야기는 성찰적 이론의 도움을 통해 구성되면서 ‘우리의 도시’에 관한 지식, 즉 도시에 관한 주체적 앎을 만들어내는 질료가 되었다. 그러나 도시현실은 탈근대적인 것으로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탈각하지 못한 근대 도시로서의 특질이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이행기 한국 도시가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1990년대 초중반 한국 도시를 들여다보면 근대와 탈근대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합리와 불합리 등의 요소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전체로서 융합을 이루는 특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도시의 근대성(modernity)을 ‘혼용적 근대성(hybrid modernity)’으로 규정하는 잣대가 된다(조명래, 2005). 혼용성을 표현하는 도시는 대단히 유연하다 하여, 1990년대 중반 한국 도시를 ‘유연적 도시(flexible city)’라 부른다(Cho, 1999).

5. 1998년에서 2002년: 신자유주의화와 시민적 도시지식

1) 정치경제적 상황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자본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자본주의가 성장과 쇠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이클 상의 구조적 위기를 처음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위기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누적된 과잉시설이나 부풀려진 가치구성을 추슬러 새로운 축적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구조조정기이기도 하다. 실제 1997년 위기를 거치면서, 정경유착, 재벌식 독점, 노동탄압 등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축적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라 할 수 있는 시장경쟁원리를 표방하는 자본의 지배가

구축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대가로 ‘국민의 정부’는 이른바 4대 부문(정부, 재벌, 금융, 노동)을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했다. 그 결과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시장 경쟁 이념인 신자유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후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적인 이념적 기제로 작용했다.

세계 자본주의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때문에 환란 이후의 개혁은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권의 이념적 성향으로 인해 한국적 신자유주의에는 국가-자본-노동이 연대하는 ‘조합주의(cooperatism)’가 일정하게 가미되었다.³⁾ 국민의 정부가 ‘한국적 제3의 길’을 표방하면서 ‘시장 민주주의’를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았던 것은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새 정부는 독점적 산업자본을 대신할 신자본(예: 벤처자본, 코스닥자본)을 육성하는 등 한국자본주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이로써 IMF 위기 이후 새로운 부의 창출기회, 신산업, 신중산층, 신개발지역 등이 나타났다. 산업영역에선 정부의 집중적 육성 덕택에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우뚝 서게 했다. 생활영역에서는 인터넷, 손전화 등 IT를 활용하는 새로운 소통적 일상관계가 생겨났다. 사회영역에선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루면서 이로부터 부를 얻는 신흥 부유층이 출현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신자유주의에 의해 추동되거나 그 논리를 반영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한편 진보적 성향의 정권 출범으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일정하게 활기를 띠었다. 이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지형에 변화를 불러오면서 전체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국가통치영역에 ‘정부-비정부 간 협력을 통한 통치’인 거버넌스(협치)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사회적 공공성(예: 복지, 환경)을 옹호하는 시민사회의 발

3) 그래서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질서적 신자유주의’라 부르기도 했다.

언과 그 실현을 위한 집합적 실천(예: 시민운동)이 두드러졌다.

2) 도시쟁점과 도시주체의 반응

IMF 위기의 여파는 도시공간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그리고 산업 활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천, 울산 등)을 중심으로 위기의 폐해(예: 공장폐쇄, 실업증가, 집값 하락 등)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 이후의 변화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가령, 금융자유화에 따른 국제 금융자본의 유입, 벤처 붐, IT관련 산업과 소비방식의 고도화, 새로운 소비계층과 고급 주거양식(예: 주상복합아파트)의 출현 등은 모두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들은 도시의 산업구조, 고용구조, 계층별 소득 및 지출구조적 지각변화의 전조였다. 서울의 경우, IMF 위기 이후 생산자 서비스 관련 업종(예: 금융, 보험, 광고기획, 디자인 등)이 가파르게 성장한 반면, 전통적인 제조 및 판매 관련 업종은 현저하게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 전체 고용자수는 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과 저소득 임시직(비정규직) 사이에 고용성장과 임금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IMF 위기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신중산층이 선호하는 주거시설(예: 고층주상복합건물)이 새로운 부동산 부를 창출하게 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신상류층 지역이 등장했다. 이는 계층 간 주택 불평등 심화와 함께 지역 분화(예: 서울의 강남-북 분화)를 촉진하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를 초래했다. 양극화는 IMF 위기가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도시사회 변화의 핵심이었다. 1990년대 이후 도시적 정체성과 자의식을 가진 도시주체가 등장했지만 IMF 위기를 겪으면서 이들의 삶의 관계는 자본주의하의 계층적 질서로 편성되었던 것이다.

한편 IMF 위기 이후 수도권으로 인구가 다시 집중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방경제는 상대적으로 황폐화되는 반면 대도시 경제는 붐을 일으키자 지방에서 방출된 인가와 활동이 수도권으로 몰려들

있던 것이다. 이러한 집중은 개발수요를 낳아 대도시 지역 안과 밖에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 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 여파라 할 수 있는 규제 완화(탈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는 2000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였다. 탈규제가 대규모 개발과 결합하면서 이른바 난개발이 전국을 휩쓸었는데 전 국토의 27%를 차지한 준농림지의 마구잡이 개발이 특히 심각했다. 국민의 환경 자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는 이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시민운동의 빌미가 되었고, 그 결과 개발세력과 보전세력 간의 대립을 축으로 하는 환경갈등이 한국사회의 지배적 갈등으로 대두했다. 아울러 시민운동 전반이 활발해지면서 ‘거버넌스(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도화가 다양하게 강구되었다.⁴⁾ 덕분에 도시주체들은 도시공간을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읽고 바꾸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질서로 짜이는 도시현실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다.

3) 도시공간의 생산

도시 공간의 생산이란 측면에서 이 실험은 우선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과 지구의 배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기법과 개별 건축물 단위의 디자인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설계 기법을 결합한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지구상세계획제도를 발전시킨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을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를 고려하는 설계적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점이다. 이 계획적 통제는 인공건조물의 형태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설정되는 도시적 삶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콘텐츠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이때부터 도시개발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이루어

4) 대표적인 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 전국 지자체들의 지방의제21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졌고 도시경관은 이에 따라 심대한 변화를 겪었다. IMF 위기 후 초고층 주상복합주거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도시 전역에 출현한 것은 이러한 계획적 개발의 결과였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 개발은 그 내면에선 부동산 개발논리를 철저히 반영했다. 계획기준에 충실할수록 개발이 더 쉬워졌고 개발규모가 각종 인센티브로 증가하게 되는 데, 이러한 조건이 곧 지구단위계획이 부동산 개발과 결합되는 고리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논리(자유경쟁논리)가 계획 장치를 통해 도시공간의 생산에 침투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한 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제도의 도입에서도 발견된다. 1971년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개발행위를 철저히 통제해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확장과 녹지과피를 막는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 대선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했고 취임 후엔 협의체를 만들어 100대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사회적 저항을 직면하자 정부는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의 권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 내에서 조정과 해제구역을 지정하고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계획체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경제위기 이후 폭증하는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그린벨트를 편의적으로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을 계획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역할만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계기로 대도시 주변의 개발압력은 오히려 높아졌고, 이를 빌미삼아 2002년 정부는 강남 대체용 신도시란 명분으로 판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제2기 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했다.

지구단위계획이 미시적 공간생산의 계획적 도구라면 광역도시계획은 거시적(광역적) 공간생산의 계획도구라 할 수 있다. 양자는 도시단위의 계획기법을 섬세하게 적용하면서 광역적 규모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이는 탈개발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시공간의 생산에서 ‘계획(planning)’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말해준다. 실제 당시 도

시개발 분야에서 화두는 ‘선 계획, 후 개발’이었다. 위기 이후의 개발수요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한다는 명분이 ‘계획’을 강조하는 배경이었다. 따라서 ‘선 계획’이란 담론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민사회적 논의는 물론 계획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당위성에 관한 시민사회적 논의가 담겨 있다. 2002년 전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는 과정에서 ‘계획’에 관한 담론은 더욱 풍성해졌다. 그러나 계획제도의 강구와 계획담론의 풍부화가 도시공간 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산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도시현실은 IMF 위기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 논리를 투영하는 식으로 재편됨에 따라 도시 공간생산의 계획적 실험도 그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4) 도시해석

IMF 위기가 도시를 통해 집중적으로 전개되면서⁵⁾ 도시현실은 심대한 변화를 겪었다. 그간 성장기 동안 열기설기 꾸려지던 도시의 일상관계는 위기를 겪으면서 철저한 자본주의적 삶의 관계로 바뀌었다. 중간층이 줄어들면서 상층과 하층으로 사회계층이 분극화(양극화)되는 도시사회구조의 출현은 신자유주의 경쟁법칙(승자독식 법칙)에 따라 도시의 고용 및 일상 관계가 재편되는 데 따른 결과였다. IMF 위기는 일차적으로 물질적, 탈물질적 삶에서 상대적 결핍과 박탈이 새롭게 심화되는 이른바 신빈곤(new poverty) 현상을 불러왔다(한국도시연구소, 2006). 실업자, 노숙자, 사회적 약자, 복지수요층, 비정규직, 일하는 빈곤층 등으로 일컬어지는 도시 약자,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도시(적 사회)문제는 도시를 ‘사회적 공간’으로 읽고 해석하는 지적 성찰을 자극했다. 나아가 도시정책의 화두도 물리적 공간환경의 개선에 관한 것에서 도시민 삶의 안정과 복지를 다루는

5) 이를 ‘위기의 도시화’라 부른다.

사회정책적인 것으로 옮겨갔다.⁶⁾ 이는 도시의 지식지형에 도시약자의 관점을 대변하는 부분이 그만큼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의 결과로 한국사회가 새로운 성장 붐을 맞게 되면서 사회약자와 관련된 도시지식은 점차 잔여적인 것(residual)으로 바뀌었다. 대신 위기로부터 빠른 회복, 이와 연계된 새로운 성장 붐과 관련된 도시현실에 대한 인지와 성찰이 도시지식의 새로운 콘텐츠로 들어왔다. 이를테면 신산업지역(예: 테헤란 벨리), 새로운 소비양식(예: 신용카드 보급에 따른 소비의 고도화), 새로운 주거양식(예: 타워팰리스로 대표되는 주상복합아파트), 새로운 자산증식 방법(예: 주식투자), 여행 자유화에 따른 세계화의 체험, 고소득 안정적 직업 활동, 과열화된 교육열 등과 관련된 도시현실이 도시주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고 해석하는 소재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 도시의 지식지형엔 이렇듯 위기가 불러온 도시의 그림자보다 위기 이후의 빠른 경기 회복이 가져온 도시의 빛을 응시하는 지적 전망이 더 우월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빛은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 즉 글로벌 스탠더드인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살아남게 된 승자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었다.

빛과 그림자로 짝을 이룬 위기 후 도시현실을 그려주는 정확한 표현은 ‘양극화’다. 말하자면 위기 후 도시의 지식지형에 강하게 비친 도시의 빛은 기실 신자유주의화에서 배제되는 시장약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다른 면에 불과한 것이었다. 도시의 이 같은 현실을 망라해서 표현하는 핵심어는 ‘신자유주의의 도시화(urbanization of neo-liberalism)’라 할 수 있다(Cho, 2002). 1997년 IMF 위기가 진행된 도시를 읽고 해석하는 전망 속에 깔린 지적 인식소(認識素)는 ‘신자유주의’였다. ‘신자유주의’란 개념이 체계공해주는 지적 전망으로 위기 이후 변모한 도시현실의 다면성을 읽으려

6) 이는 김대중 정부가 한국적 제3의 길을 구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조성된 정책환경의 결과이기도 하다. 당시 청와대의 ‘삶의 질 기획단’은 국가통치 차원에서 도시 복지를 생산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었다.

고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 도시화’란 관점으로 위기 이후의 한국 도시를 이해하고 성격을 규정하기엔 시간적으로 다소 일렀다. ‘신자유주의의 도시화’를 반영하는 도시현실의 특징은 그 후 10년이 더 지나서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 뭔가였다는 뜻이다.

대신 위기 이후 도시에 관한 우월한 지식담론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것이었다. 이는 위기 이후의 도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 및 도시의 지속불가능성에 관한 도시주체들의 위기의식,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열어 준 사회참여의 기회가 맞물리면서 생성된 도시 지식의 새로운 지형인 셈이다. 지속가능성은 현 세대 내의 형평성,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 인간종과 생물종 간의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대안적 발전개념이다.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삶의 질, 생태적 균형,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발전의 방식이 곧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혹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조명래, 2006). 1990년대부터 한국의 도시들은 탈발전주의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붐으로 인해 국토환경의 심대한 훼손과 파괴가 초래되자, 이에 대한 지적, 실천적 반응으로써 지속가능성이 도시를 읽고 해석하는 대안적 관점으로서 들어오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의 한국 도시를 읽는 도구로서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엔 개발과 보전의 조화, 선 계획 후 개발, 시민의 주체적 참여, 민주적 거버넌스의 쟁점들이 모두 녹아 있다. 그러나 현실의 도시관리에서 이러한 특질의 지속가능성이 제도로서 제대로 담보되지 못했다. 더 정확히는 현실의 역학관계 때문에 도시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이 퇴보하거나 왜곡되기까지 했다. 개발주의자와 보전주의자 사이의 불평등한 대립,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 관료주의의 지배 등이 온존하는 도시의 통치구조 속에서 지속가능성은 시민사회적 요구에 반비례하여 오히려 억압되거나 왜곡되었던 것이다.⁷⁾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도시의 발전단계에

7) 고건 시장 시절 서울시가 쓰레기로 매립한 난지도의 일부를 대중 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하자 서울시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관장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이

지속가능성이 그만큼 요청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요청은 특히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즉, 생태환경의 파괴를 제어하지 못한 도시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한 대안 모색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도시를 읽고 바꾸는 준거개념으로 선호되었던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성은 ‘신자유주의의 도시화’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주목되었다. 신자유주의가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면 될수록, 그와 연계되어 심화되는 도시 양극화의 문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도시화를 주목할수록 도시의 지식지형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전망은 더 뚜렷이 부각되었다.

5) 도시론

신자유주의의 도시화와 관련된 것이든,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든, 2000년대 들어 도시에 관한 지적 관심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도시들이 세계화와 관련된 신자유주의란 이념적 풍랑 속으로 말려드는 상황, 그리고 성장기 도시의 한계적 상황은 도시를 큰 틀과 사유 속에서 읽고 해석해야 하는 까닭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중 신자유주의의 도시화를 주목하는 도시담론은 비판적이면서 구조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도시담론은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비전적인(실천적인) 인식을 깔고 있다. 따라서 위기의 가파른 회복이 가져온 긍정적인 사유가 선호되면서 전자보다 후자의 관점으로 2000년대의 도시현실을 읽고 해석하는 지적활동이 더 두드러졌다. 이는 당시 한국사회과학계 전반에 빠르게 유포되던 ‘생태담론⁸⁾(문순홍, 1999), 즉 국

를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지만, 서울시는 당초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 시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합의나 원칙과 어긋나는 것, 즉 관료주의의 우월성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주도적 경제성장에 대한 반성, 경제와 환경의 상생, 인간과 자연의 균형, 생태이론, 녹색정치 등에 관한 담론이 도시에 관한 논의에 도입되면서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도시론, 생태도시론, 거버넌스도시론, 참여도시론, 시민도시론 등이 강단학계는 물론 정책분야, 사회운동 영역에서 동시에 널리 회자되었던 새로운 도시론이었다.

물론 이러한 도시론이 기존의 정책지향적 제도권 도시론이나 비판적인 사회과학적·인문학적 도시론을 대체하거나 능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 즉 생태순환적 관점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봄으로써 기존 인간중심주의 도시론을 비판하면서 이를 넘어 서려는 시도는 기존 도시론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되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행정시책에서 지속가능성은 대안적 의제로 채택되고 또한 정부-주민 간 파트너십을 통한 실천의 대상이 됨으로써, 종전의 어떠한 도시론보다 실천성을 강하게 표방하는 차이점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도시론은 정부나 제도영역에서 시민사회 쪽에서 더 활발히 제기되고 주창됨에 따라, 도시담론 자체가 시민사회적 이념과 원리를 반영하는 시민사회담론 혹은 시민운동담론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실제 이러한 도시론을 이끌었던 지식인들도 대부분 제도권 학회보다 시민단체에 참여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실천적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6) 도시의 근대성

IMF 위기는 자본주의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겪었던 구조적 위기였던 만큼, 이의 현상으로서 한국의 도시들은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재편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와 함께 위기 후의 빠른 회복 덕택에 도시가 탈규제적(신자유주의적) 개발의 장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도시적 삶의 지

8) 생태담론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전제하는 생태주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중심주의에 의거한 기존의 사유와 가치체계는 근본적으로 재성찰하거나 넘어서고자 한다.

속가능성은 근본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도시주체들의 대응(국가와 자본의 권력에 대칭되는)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협치(국가-시민사회의 협력)에 의한 도시적 삶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는 도시를 통해 추구되는 근대적 가치, 즉 근대성 자체를 시민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지속가능성이란 대안적 발전가치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었다. 도시에서 전개되는 근대적 삶의 변화를 시민주체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도시의 근대성은 ‘해석적 근대성(interpretative modernity)’으로서의 특징을 일정하게 표방했다(조명래, 2005).

6. 2003~2007년: 신개발주의화와 권력적 도시지식

1) 정치경제적 상황

2003년 참여정부의 등장은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두 번째 집권이란 의미에 더해 ‘시민사회의 정치화’란 정치사회의 변화를 불러오는 의미를 띠었다. 민주화 운동 세대들이 제도 정치권으로 대거 진입하면서 국정운영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실제 참여정부 동안 주요 국정과제들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어 집행됨으로써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⁹⁾ ‘시민사회의 정치화’는 국가권력이 시민사회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스스로 탈권위화를 추구하면서 중앙집권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 국정운영의 최대 역점을 두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분권, 분산, 균형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공간

9) 이를 두고 비판적인 보수언론들은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렀다.

을 통한 권력구조의 재편을 도모하는 일종의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기능을 지방으로 넘기면(분권, 분산), 지방은 이를 권능으로 하여 스스로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균형) 곧 공간을 통한 권력구조의 재편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중앙(서울)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불러왔지만(예: 수도이전반대운동) 한국사회의 권력적 모순을 척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절대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땅에 발을 붙이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는 공간전략의 정치적 논리는 경제논리로 바뀌었다. 즉, 추진단계의 분권·분산·균형정책은 경쟁논리, 혁신논리, 개발논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개발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 분권·분산·균형 관련 정책들은 IMF 위기 이후들이닥친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예: 경쟁, 혁신, 성장 등)를 밑에 깔고 국토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이른바 ‘신개발주의’란 새로운 개발주의를 불러왔다(조명래, 2006). 물론 신개발주의라 해서 국토환경을 막무가내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전 타당성 검토, 계획수립, 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등과 같이 환경을 배려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적 절차를 일정하게 지켰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개발주의 프로젝트는 국토환경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가치 생산을 위한 것으로 활용(개발)하는 강한 신자유주의 성향을 반영했다.¹¹⁾ 따라서 신개발주의 프로젝트로서 분권·분산·균형정책은 국토환경을 과거보다 더 유기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신개발주의의 병폐와 한계가 되었다. 또한 중앙에 대비되는 지방의 권력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운용됨에 따라, 신개발주의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과 같은 새로운 공간사회적 갈등을 동반하기도 했다.

10) 신개발주의는 이런 점에서 과거의 물리적 성장에 우선하는 국가주도의 구개발주의와 구분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명래, 2006 참조).

11) 신개발주의는 그래서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2) 도시쟁점과 도시주체의 반응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도시공간은 전에 없는 변화의 강한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 이 압력은 크게 두 가지 층위를 통해 작용했다. 하나는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적 관계를 통해 작용했다면, 다른 하나는 지방 수준의 시장적 관계를 통해 작용했다.

국가적 제도수준에서는 참여정부가 수도 이전과 함께 전국에 다양한 성장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도시정책이 야기한 도시공간에 대한 변화 압력을 말한다. 이 압력은 기존 도시의 혁신역량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화도시 등 새로운 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이 야기하는 것을 망라한다. 어떤 경우이든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만큼, 국가적 수준의 역학관계, 즉 중앙집권세력과 분권세력, 기득세력과 변혁세력 간 관계를 통해 도시에 대한 인지와 바람직한 도시의 상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도시의 일상주체들이 도시를 읽고 해석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다. 물론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중심으로 도시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도시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점이 일정하게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만큼 도시에 관한 정책적 논의와 도시변화의 압력은 전국에 걸쳐 나타난 것으로 기존의 대도시 중심의 것과 달랐다.

한편 지방적 시장 수준에서는,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식 경기호황이 몰고 온 부동산 열풍, 이를 정책이란 탈을 쓰고 추구하는 첨단 도시개발(예: 청계천 복원 등)에 의해 도시변화의 압력이 만들어졌다. 이는 도시공간이 신자유주의(시장경쟁) 논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재편되는 도시적 상황, 즉 토지주택의 투기 시장적 가치가 강화되는 데(이를 거품이라 부르기도 함) 따른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기록적인 무역흑자, 신산업(IT산업)의 급성장, 주식시장의 활황 등으로 이어진 경제호황은 막대한 잉여자본을 사회적으로 발생시켰다. 부동산금으로 불리는 잉여자본이 투자처를 찾아 부

동산 부문으로 몰려들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은 참여정부의 가장 뜨거운 도시쟁점이면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실제 참여정부 동안 주택가격이 2배 오를 정도로 부동산 광풍은 전국화함으로써 투기적 이익을 좇는 도시개발의 압력은 그만큼 높았다. 신자유주의 논리를 반영하는 도시개발은 고가의 주상복합단지 건설, 대형 평수 중심의 강남 재건축,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도심복원(예: 청계천 복원), 도시재생이란 이름의 뉴타운 건설과 같이 명분상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즉, 투기적 가치의 생산을 높이는)데 우선했다. 도시개발의 이러한 조건과 방식을 둘러싼 도시 주체들 간 갈등은 도시정치의 핵심쟁점이 되었다. 이 갈등은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되고 그로부터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지역¹²⁾일수록 증폭되어 급기야 참여정부의 진보적 정치노선에 대한 보수세력의 저항으로까지 발전했다.

3) 도시공간의 생산

참여정부의 국정운동에는 역대 다른 정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을 매개로 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시공간을 생산하고 변경시키는 정책과 그 집행의 강도가 높았다. 이는 역대 정부의 도시정책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었다. 또한 권력의 공간적 재편을 전제로 한 공간정책의 추진과정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갈등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험적인 도시건설 방식과 기법을 끌어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추진된 도시건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도시공간생산과 차이가 있었다. 첫째, 도시 자체의 건설이 목표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도시의 성격, 기능, 개발방식, 추진체계에 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12) 재건축 규제를 강하게 받고 높은 세율의 종부세 과세 지역이었던 서울의 강남 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논란을 낳았다. 둘째, 도시공간 자체를 계획하고 생산하는 방식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해진 건축설계의 기법이 활용되었고, 또한 추진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과 같은 제도 장치가 적극적으로 강구되었다. 가령,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기관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신행정수도건설(후에 행복도시로 전환), 균형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기여란 명분으로 추진된 기업도시건설, 공공이 주도해 지방에 혁신거점을 만드는 혁신도시건설, 문화적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문화수도건설 등은 모두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면서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실험적인 도시건설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참여정부하의 도시개발은 권력의 공간적 이전이란 목적을 띠었고, 또한 추진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을 수반함으로써 ‘도시공간 생산의 정치화’가 두드러졌다. 도시의 설계방식이나 개발 콘텐츠가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것도 공간생산의 정치화에 따른 현상이었다.¹³⁾ 그러나 이는 비단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정책에서도 그러했다. 그 예로 서울시가 추진한 청계천 복원을 포함한 일련의 도시개조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인 청계천 복원의 경우, 당초 ‘역사, 환경 복원’이란 명분으로 접근되었지만, 실제 철저한 도시경쟁력 확보란 개발논리에 따라 추진되었고, 또한 ‘대권용 지적 쌓기’란 정치적 의도를 숨긴 채 추진되었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은 내용적으로 ‘신개발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었지만, 청계천 복원을 통한 도심재창조란 공간생산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관료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동안 도시개발의 실험성은 그 어느 시대보다 두드러

13) 가령,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가권력의 새로운 거점으로, 기업도시의 자본권력의 새로운 거점으로, 혁신도시의 지방의 혁신역량이란 대안적 공간권력을 만들어내는 거점으로, 문화수도는 문화(거점)를 통해 권력의 공간적 안배를 실현하며 거점으로 각각 추진되었다. 또한 각각의 신도시는 비전설정으로부터 계획과 설계, 공간구성, 추진기구 및 지원법 등을 두루 구비한 채 추진되었는데, 이는 그 만큼 신도시에 대한 권력으로부터 지원이 컸음을 보여준다.

졌고 활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간부문에서도 그러했다. 대표적인 예로 건축가들이 중심이 되어 마스터플랜류의 도시계획방식을 거부하고 단지별 공동성(communality)을 건축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생산한 ‘과주출판도시’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도시공간이 구현해낼 새로운 가치로서 건축적 공공성을 설정하고 이를 건축가들이 공동체적 설계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과주출판도시는 한국의 도시계획사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 실험적인 공간생산의 모델이다. 건축도시로 불리는(공간문화적 특질을 강조하는) 이 모델은 정부가 주도한 신도시 건설의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가령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서 설계공모를 통해 단지별 공간구성의 방식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단지별 공간의 특질을 건축 디자인의 공공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건축도시의 조성기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4) 도시해석

도시개발의 ‘정치화’는 도시에 관한 읽, 즉 도시지식의 ‘권력화’를 불가피하게 했다. 이는, 도시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나 행정구역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권력구조를 떠받치는 바탕이면서 동시 이를 담고 있는 틀이 되어 있는 도시현실의 지적 반영이다. 과거와 달리 도시지식의 지형은 도시공간이 권력추구의 장으로 재조직되고 또한 이러한 장으로 읽히고 해석되는 도시 관련 주체들 간의 역학관계를 투영했다.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집약적으로 전개되는 장소로 기능해 오는 동안 도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권력관계를 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념적 전망을 달리하는 정권(지배세력)의 등장으로 도시공간은 권력 재편의 한 방편이 되었는바, 이는 곧 참여정부하의 도시개발정책이 추진되는 도시적 상황이 되었다. 말하자면, 진보적 성향의 정치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거버넌스)를 통해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권력관계의 지형변화가 도시를 읽고 해석하

는 지형, 즉 도시의 지식지형에 투영된 것이다. 새로운 지식지형에서 중심적인 지식주체는 도시의 일상주체에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 엘리트로 바뀌었다. 이들이 도시를 읽고 해석하는 앎의 관계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정책을 둘러싼 지식지형의 중심을 이루어졌던 것이다. 크게 보면 이 지형은 신 지배엘리트 집단(탈중앙집권세력, 진보적 개혁세력)과 구 지배엘리트 집단(중앙집권세력, 보수적 기득세력) 간의 도시 해석을 둘러싼 갈등관계를 기본 축으로 했다. 때문에 이는 권력집단지배(엘리트) 내에서 상이한 분과 간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의 일상주체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기존의 도시지식지형과는 다른 것이다. 도시지식의 권력화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새로운 지배엘리트들은 한국사회의 권력구조를 공간적으로 개혁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권력기구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혁신위원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등이 도시지식의 생산과 이의 정책화를 직접 주도했다.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도시지식의 생산은 도시와 관련하여 진보적인 성향의 전문가¹⁴⁾들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연구기관(예: 국토연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나 학회(예: 국토도시계획학회)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 위원회, 전문관료, 진보적 도시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연구기관, 학회 등이 권력화된 지식 카르텔이 되어 참여정부의 도시정책을 뒷받침하는 도시지식과 정책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했다. 실행정수도론, 기업도시론, 혁신도시론, 문화도시론 등은 참여정부의 주요도시정책이면서 동시에 개별정책들이 고유하게 생산하고 유포한 도시론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지향적 도시론들은 각자 다양한 도시 관련 철학, 이념, 그리고 이론들로 구성되었다. 가령, 행복도시(론)는 권력의 공간적 이전과 관련된 도시철학과 이념, 그리고 이를 도시계획적으로 구현하는 공간구성에 관한 이론과 기법에 관한 다양한 도시지식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14) 이들은 대부분 도시 관련 시민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서 도시지식은 강단에서 논의되는 추상지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실제의 도시로 구현되는 구체지로서의 특징마저 띠게 되었다.

참여정부 기간에 도시담론은, 비록 권력화되긴 했지만, 역대 정부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덕택에 전체로서 도시지식은 크게 진일보했다. 그러나 정책지향적 도시지식이 일상인들이 도시를 읽고 해석하며 바꾸고자 하는 관점을 제대로 반영했느냐는 분명히 다른 질문이다. 진보적 도시전문가나 도시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가 도시정책의 입안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적 관점을 일정하게 반영했지만, 이들 정책이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때는 현실의 지배적인 경제논리 혹은 개발논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이들 정책은 시민사회,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주민참여 등의 가치를 주장하는 세력(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으로부터 갈등을 불러왔다. 이는 권력화된 도시지식과 도시 일상주체들이 선호하는 도시지식 간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5) 도시론

도시공간의 생산과 실험이 활발했던 것에 견주어 도시 자체를 도시의 일상주체의 관점에서 읽고 성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일상주체들이 그들의 삶터로서 도시를 논쟁하는 것은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내놓으라는 도시전문가나 도시계획가는 대부분 도시공간을 연구하는 데 보다 도시공간을 창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실행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삶터로 도시에 관한 지적 성찰이 상대적으로 더욱 소홀해졌다.

그렇다고 새로운 삶의 관계를 담아내는 터전으로서 도시를 바라보고 이를 현실도시와 견주어 고민하면서 구현하고자 하는 지적노력이 없었던 아니다. 참여정부의 다양한 정책지향적 도시론을 음미해 보면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이념형적 도시론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으로써 ‘문화도시’론을 말한다. 문화도시론은 문화를 도시의 전체 주제로 하여 그 존재조건은 물론, 성장과 발전의 조건을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도시론을 말한다. 성장기의 토목적 도시, 탈발전기(과도기)의 유연적 도시, 신자유주의기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단계를 지나, 지금 ‘되어야 할 도시(ought-to-be city)’의 이상은 바로 문화도시란 것이다. 문화가 도시의 주제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은, 도시에서 먹고 살아가는 기반이 문화적인 뭔가로 바뀌고, 삶터로서 도시는 나다움(개성)과 품격을 표출하며, 도시경관은 추슬러져 있으면서 매력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도시의 선진화를 말한다. 정책적 도시론이 비록 권력화된 도시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도시개념은 ‘문화도시’를 하나의 표준모델로 삼고 있다.

문화도시론은 서구에서 쇠퇴한 도심을 문화적으로 재생시키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시론으로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선 2000년을 전후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문화관광진흥이나 도시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사업을 뒷받침하는 도시론으로 등장했다. 이런 상황은 학계에서 문화도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배경이 되었다. 아울러 정부가 다양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예: 아시아광주문화중심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부산영상문화도시 등), 하나의 보편모델로서 문화도시론이 주목되었다. 이론적으로 문화도시는 ‘문화사회의 도시’라 할 정도로 문화적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탈근대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되는 도시유형으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창조도시(creative city)’란 개념으로 대체되어 사용되면서 문화도시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도시론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문화도시론은 문화이론가, 공간이론가, 건축학자, 조경학자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되면서 새로운 도시담론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행복도시, 기업도시, 출판도시, 문화수도 등과 같이 실제의 도시로 조성될 때 문화도시는 도시의 건축물을 핵심지표로 해서 가능된다. 출중한 건축물이 문화도시의 구체성을 담보해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화도시론은 도시에 관한 비전설정이나 성격규정에 다분히 건축담론이 강하

게 결합되는 특징을 갖는다. 문화도시론은 그래서 건축도시담론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표방한다. 참여정부 동안 저명한 건축가들이 생산한 건축도시론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샀고, 이들이 도시정책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건축담론은 실제의 도시로 구현되었다.

6) 도시의 근대성

문화도시론이든 건축도시담론이든, 새로운 도시 건설을 통해 설계자, 건축가, 도시계획가, 정책결정자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상이 있다.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 공통성은 ‘도시의 한국성(urban Koreanness)’이다. 말하자면 우리다움을 도시 공간 속에 복원하고 구현하자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건설에만 아니라 기성도시의 개발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최근 들어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의 중소도시 개발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구)도심복원’ 혹은 ‘재생’이다. 뜯어내고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되, 새로운 공간 속에는 그 도시가, 그 장소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장소의 경관구성, 건축물의 구성 등으로 반영해내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는 랜드마크 건축물 중심으로 단지를 재구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도 도시다움 혹은 도시의 정체성이 대도시 경쟁력 확보에 핵심요소를 암시해준다. 이런 근대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특징은 혼용적, 갈등적, 해석적 근대성과 다른 경향의 근대성을 출현시켜준다. 자기다움을 찾고 표출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향의 근대성을 ‘재현적 근대성(representational modernity)’이라 할 수 있다.

7. 결론: 한국 도시지식과 도시담론의 유형화

이 글에서는 우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도시현실에 대한 도시주체들

의 지적반응으로써 도시지식의 등장과 그 진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도시 지식은 도시에 관한 얕으로 정의했고 도시를 읽고 해석하는 도시주체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한다고 했다. 이렇게 형성된 도시지식은 시대마다 그 유형을 달리하는바, 우리는 ‘토목적 도시지식’, ‘성찰적 도시지식’, ‘시민적 도시지식’, ‘권력적 도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토목적 도시지식’은 성장기 도시의 모순(토지주택문제)에 대한 시민적 반응을 국가가 정책(도시정책)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생성된 것으로, 도시를 물리공간적 실체로 간주하면서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하거나 새롭게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개별 지식들로 구성된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도시에 대한 관리는 도시의 기능이나 구조(특히 산업구조, 토지이용구조)의 개편에 기여한다는 가정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지식은 제도권(정부,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선호되고 있다.

‘성찰적 도시지식’은 탈발전주의 도시화 단계로 옮겨가는 도시상황을 다양한 이론적 자원을 이용해 성찰하는 것으로, 도시를 물리적 공간이나 정책대상으로서 아니라 사회구조나 문화적 실체(도시성)로 대상화하는 개별 지식들로 구성된다. 이 지식은 도시주체들이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기 시작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도시에 대한 사회과학적 비판이나 인문학적 해석이란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 지식은 제도권 도시지식과 대조를 이룬다.

‘시민적 도시지식’은 위기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시민사회적 대응으로 생성된 것으로, 도시를 지속가능한 삶을 구현하는 장으로 조성하는 개별지식들로 구성된다. 도시주체들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삶의 터의 문제로서 도시문제를 읽고 풀려고 하는 만큼, 이 지식은 사회운동적 지식으로서의 특징을 띠으로써 현학적인(성찰적) 도시지식과 구별된다.

‘권력적 도시지식’은 진보적 성향의 지배엘리트들이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수단으로 도시를 읽고 해석하는 가운데 생성된 것으로, 도시를 권력관계(국가권력, 자본권력, 공간권력 등)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개별지식들로 구성된다. 이 지식은 대안적 권력공간을 생산

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구체화(예: 문화도시론, 건축도시론)되어 있지만, ‘권력화된 지식’으로 성향 때문에 일상주체(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지식과 비교된다.

상이한 유형의 도시지식은 도시해석을 둘러싼 지식주체들 간의 상이한 역학관계를 반영한다. 도시지식의 유형차이는 도시화 단계에 따른 차이에서 일차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그러한 역사적 차이가 퇴적된 결과로 현재의 도시담론 지형에도 투영된다. 즉, 도시화 단계별로 생성된 도시지식의 여러 유형은 현 단계 도시에 관한 담론을 다양하게 형성하는 질료로 들어와 있다. 이를테면 토목적 도시지식은 ‘제도적 도시담론’으로, 성찰적 도시지식은 ‘비판적 도시담론’과 ‘인문학적 도시담론’으로, 시민적 도시지식은 ‘사회운동적 도시담론’으로, 권력적 도시지식은 ‘건축적 도시담론’으로 각각 구축되어 있다.¹⁵⁾ 도시담론은 도시지식이 담론적 세력으로 확장된 것을 표현한다.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특정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며 처방하는 입장 차이는 도시담론의 유형차이로 환원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도시담론

이는 제도권 학회(예: 국토도시계획학회)나 연구기관(예: 국토연구원)이 주도적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달리는 ‘정책적 도시담론’이라 부를 수 있다. 토목적 도시지식을 원형으로 하는 도시계획학이나 지역개발학의 다양한 개별이론들을 활용하여 도시를 논구하되 주로 도시계획이란 정책대상으로 접근한다. 제도권 담론 혹은 정책적 담론의 생산자들은 연구재원의 확보나 연구결과의 현실적 반영이란 측면에서 특권을 향유하고

15) 도시담론(urban discourse)은 도시를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읽고, 어떠한 실천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어느 차원으로, 어떠한 이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제도권의 보수적 담론과 운동권의 진보적 담론, 정책담론과 이론담론, 시장주의 담론 대 사회민주주의 담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있고, 또한 강단을 통해 그들의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고 있는 만큼, 주류담론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도구적 이론에 집착하고 이념을 경시함으로써 이 담론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지배이념과 일체화되는 편향성을 띠지만 그들 스스로는 이를 간파하지 못한다. 제도권 도시담론의 이념성은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건설, 재개발, 수도권정책과 같이 민감한 정책 사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할 때 대개 시장주의나 개발주의 입장을 드러낸다. 기성학계 혹은 강단학과 구성원 대다수가 제도권 담론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개별적인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구성원들은 대개 시장주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도시공간의 공공성 보전보다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의 입장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담론 창구로는 ‘국토계획’이나 ‘국토연구’와 같은 학회나 연구기관의 기관지가 주로 이룬다.

둘째, 비판적 도시담론

이 담론은 사회과학계에 한때 품미했던 정치경제학적 시각을 도시공간연구에 접목시키면서 생겨난 것으로 달리는 ‘공간정치경제학적 도시담론’이라 부를 수 있다. 1990년대 서구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던 공간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도시공간을 해석하는 이 도시담론을 자본주의하의 도시공간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급진적 실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입장을 주로 취한다. 진보적 성향의 학회(예: 한국공간환경학회, 기타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학회 등)에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자들이 이러한 진보적 도시담론을 생산과 유포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학습한 것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다. 그러나 참여자 개인에 따라 도시와 지역공간의 정치경제적 해석에 집중하거나, 공간정치경제학적 인식의 지평을 생태환경의 영역까지 넓히기도 하며, 또한 도시의 일상생활세계의 모순을 정치경제학적 눈높이로 해부하는 데 역점을 두기도 한다. 비판적 도시담론이 소개되는 대표적인 창구는 《공간과 사

회》란 잡지다. 자본주의적 도시문제를 비판적으로 논구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도시담론은 제도권 도시담론과 자연스럽게 대척점에 있게 된다.

셋째, 인문학적 도시담론

1990년대 초·중반을 접어들면서 도시현상 중에 문화 관련 부분이 주요 논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도시담론 중에 문화과학적 해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겨난 인문학적 도시담론은 달리 ‘문화과학적 도시담론’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촉발된 다양한 문화이론들을 학습하고, 또한 소비적,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표방하는 신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이러한 담론은 도시의 문화적 구성을 각별히 주목한다. 그래서 도시를 물리공간적 실체나 정치경제적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앞선 담론과는 달리, 이 담론은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설정하고 도시주체나 특정장소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문화적 문맥을 읽고 해석하면서 도시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들의 도시읽기와 해석은 실제하는 도시만 아니라 소설, 영화, 광고 속에 등장하는 도시에 관한 이미지이나 스토리도 대상으로 한다. 덕택에 도시연구 분야에서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인식의 지평이 넓혀졌다. 도시이야기를 문화담론으로 풀어가는 만큼, 이 작업은 주로 실천적 인문학도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인문학적 도시담론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대표적인 창구는 ‘문화과학’란 잡지다.

넷째, 사회운동적 도시담론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수록 한국사회의 많은 모순은 도시공간이란 삶의 터전을 통해 노정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시민사회를 무대로 한 도시운동이 활발해졌고, 또한 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적 담론이 도시담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숙이

개입하는 담론의 특징 때문에 이 담론은 달리 ‘실천적 도시담론’이라 할 수 있다. NGO에 참여하는 도시학자들이 정부의 도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도시에 관한 실천적 담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담론이 도시에 관한 화두로 삼고 있는 ‘공간의 공공성’, ‘시민참여’, ‘사회적 약자의 공간권리’ 등이다. 이 담론의 참여자들은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도시행정학 등을 지적(학문적) 배경으로 하지만, 이들 학문의 보수성과 달리 진보적(운동적) 성향을 띠는 것은 이들이 공히 시민사회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이나 이념적 입장에 따라 정부의 공간정책에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는 반면 시민사회적 입장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론과 실천을 접목시키려는 구성원도 있다. 사회운동적 도시담론은 대중적 토론회, 시민단체의 각종 출판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주로 생산되고 유포된다.

다섯째, 건축적 도시담론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도시의 발달단계는 본격적인 정비기로 접어들었다. 그에 따라 도시의 미시적인 개별 장소나 건축적 공간에 대한 관심이 일면서 건축적 도시담론이 도시담론의 중요한 부문으로 등장했다. 건축적 도시담론은 건축이나 도시설계 분야의 교수나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장르의 도시비평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들의 도시에 관한 담론과 비평이 시선을 끄는 것은 논의가 구체적이고 창발적이며 또한 전망적(visionary)이란 점 때문이다. 건축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안목 덕택에, 이들은 도시공간을 대하더라도 개별 건축과 이들이 위요된 공간의 맥락, 그 속에서 인간과 건축공간이 상호 작용하는 현상을 구체적이면서 때론 형태미학적 관점으로 읽어낸다. 이러한 읽음을 통해 이들은 기존 도시정책과 담론을 비판하고 나아가 유도 피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적 주목을 쉽게 이끌어 낸다. 그래서

건축적 도시담론의 생산자 중에는 저명인사가 적지 않지만 강한 개성으로 인해 건축적(문화적) 도시에 대한 해석과 전망의 차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문화도시를 도시의 이념형으로 설정하고 건축이 도시의 문화를 구현하는 수단이자 콘텐츠로 간주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은 대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이들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기회가 됨으로써 ‘건축적 도시담론’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 Abstract

A Study on Korea's Urban Knowledge:
Focusing on the Post-1980s Urban Situation

Cho, Myung-Ra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Korea's post-1980s urban reality and its cognitive reflection on 'urban knowledge'. Analytical focus is on revealing the typology, internal power configuration and discursive attributes of urban knowledge. The reason why the time 'post-1980s' is chosen for review is because Korea's urbanization is at a phase of 'maturity' in the late 1980s and the contemporary urbanity of Korea reflects the urban characteristics obtained since then.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t begins with taking a review on the conceptual issues of city and knowledge. Then it is followed by examining the urban reality and knowledge in the four distinctive periods corresponding to governmental years: 1987~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7. In each temporal period, examination is made on the political economic situation, urban issues and the urban subject's cognitive reaction to these, urban interpretation, theorization of city and urban modernity. Final section draws the typology of urban knowledge and discourses in Korea.

Keywords: urban reality, the urban subject, urban knowledge topography, urban discourse

참고문헌

김상환 외 엮음. 2002. 『세계 지식인 지도』. 서울: 산처럼.

문순홍. 1999. 『생태학의 담론』. 서울: 솔.

조명래. 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

_____. 2003. 「도시화의 흐름과 전망」. 《경제와 사회》, 60호, 10~39쪽.

_____. 2005. 「아시아의 근대성과 삶의 터전 재편」. 아시아문화심포지엄조직위원회 주관. <아시아문화 심포지엄> 발표논문(2005. 2. 25).

_____. 2006.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서울: 환경과 생명.

존 브롬필드 지음. 박영준 옮김. 2002. 『지식의 다른 길』. 서울: 양문.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1998. 『한국도시론』. 서울: 박영사.

_____. 2003. 『도시공동체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_____. 2006. 『한국사회의 신빈곤』. 서울: 도서출판 한울.

Cho, M. R. 1999. "Flexible sociality and the postmodernity of Seoul." *Korea Journal*, vol.31, no.3.

_____. 2002. "Neo-liberal urbanism: reflections on the post-crisis Seoul,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ritical Geography, held in Bekescaba, Hungary, June 25~30, 2002.

논문접수일: 2009. 1. 10
 논문수정일: 2009. 11. 2
 게재확정일: 2009. 11. 10